

【 해외금융 뉴스: 일본 】

자녀 보육수당 재원 마련을 위한 소비세 인상 논의

□ 일본 재무상은 민주당 정부의 선거공약 중 하나인 자녀 보육수당 재원을 소비세 인상으로 마련할 방침을 밝힘.

- 최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재무상은 관련 법률을 근거로 소비세(부가가치세에 해당)에 육아 관련 부문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자녀 보육수당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할 수 있음을 언급함*.

* 자민당 정부는 '2009년도 세제개정 법률 부칙'에서 '저출산'을 소비세 용도로 추가해 명기함.

- 자녀 보육수당 지급은 과거 민주당의 대표적인 선거공약 중 하나로 재원확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소비세 인상 방안이 정부 내에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민주당 정부는 자녀 보육수당 지급 뿐만 아니라 재정개선 및 세제개혁의 주요 조치로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과 언론은 소비세 인상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후생노동성 추산에 따르면, 자녀 보육수당을 전액지급(월 2만 6천 엔) 할 경우 지방정부 부담분 포함 총 5.4조 엔이 소요되어 전액 세금으로 충당 시 적어도 소비세를 4% 인상해야 하며, 현재와 같은 고령화 속도가 이어지면 10년 후에는 7% 수준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자녀 보육수당 지급 뿐만 아니라 재정개선 및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민주당 정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소비세율(5%)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야당 및 언론은 사회보장제도 개혁 방안으로 정권 초기에 밝힌 행정비용 절감이 아닌 상대적으로 용이한 소비세 인상에 너무 집착하고 있고, 자녀 보육수당과 무상 고교교육, 고속도로 무료화 등과 같은 선거공약이 시행되면 향후 국가 재정 악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비세 인상이 현실화되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산케이신문 2/8)